

'94 환경정책 추진방향

본란은 환경처가 '94.1.18 청와대에서 환경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내용으로서 이 글의 일부는 이미 게재된 바 있으나 전반적인 환경처의 환경정책 및 추진방향을 소개함으로써 금년을 GR에 대비한 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93년에는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 분야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8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 환경행정기반을 정비하였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2조 4천억원, 폐기물관리에 9,9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환경개선에 노력하였으나 많은 시설설치사업이 공사중에 있으며 넘비현상으로 사업진도가 부진하여 그동안 누적된 환경문제의 가시적 개선은 아직 부족할 뿐 아니라, 낙동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물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비등한 한편, 국제적으로는 일부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규제를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처는 '94년도에 국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업들의 시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개방화·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시책과 제도를 개발·보완해나갈 계획이다.

I. 맑은 물 공급

맑은 물 공급의 커다란 제약요인은 팔당·대청등 6개 광역상수원은 대부분 오염원이 적은 하천의 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깨끗한 원수수질의 유지가 용이하나, 전국 상수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 중·상류의 상수원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상류의 기존 도시·공단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종말처리 뿐만 아니라 수돗물의 고도정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93년말 현재 하수처리율은 39%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의 종말처리는 극히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동중인 수질정화시설의 32.4%가 비정상적인 운영·시설용량의 부족 및 노후화, 하수관로 설치사업과의 연계부족, 전문직원의 근무기피등 여러가지 구조적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물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94년 추진계획으로는 상수원 수질관리-정수-음용수관리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94.1.15 발표된 수질관리 개선대책에

의거하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3년에 마련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93-'97)의 추진을 가속화되 기존 맑은 물 대책의 투자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하고 상수원 상류와 금호강 유역에 상수처리장등을 우선 설치하여 '96년까지 조기완료토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질환경 기초시설 조기 확충을 위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의 확대, 수질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조정등으로 추가재원 확보 방안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 관리체제를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기업형태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전문관리 체제를 확립토록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의 지표수 취수방법을 복류수 취수구조로 전환을 추진하며 4대강 하류지역의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공장을 우선 설치하는 등 상수취수장 및 정수장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II. 폐기를 적정관리

'93년도에는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93-2001)을 수립하여 재활용율을 '92년의 7.9%에서 '97년에 20.0%로, 소각처리율은 '92년의 1.4%에서 '97년에 14.2%로 증가시키고 매립처리율을 '92년의 89.2%에서 '97년에 65.8%로 감소시키는 등, 재활용과 소각에 중점을 두는 장기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품목의 확대, 제품의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의 마련과 제지, 유리등

환경처는 낙동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물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비등한 한편, 국제적으로는 일부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환경과 무역규제를 연계시키는 그린리운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94년도에 국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식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업들의 시각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개방화·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시책과 제도를 개발·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생산업자에게 폐자원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여 생산토록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촉진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에 대한 '94년도 추진계획으로 는 폐기물 처리책임을 명확히 해나가기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차등 부과하는 종량제를 도입하여 '94. 4월부터 1개 도당 1-3개시·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업무와 처리·비축기능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게 된다. 일정규모 이상 공단·공장에 자체 처리시설 설치의 의무화하는 한편, 소형 소각시설을 개발, 형식승인만으로 공장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자체처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조달물품에 재생제품을 추가 확대하고, 의무사용기관을 정부기관에서 정부투자기관까지 확대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금년부터 폐업물관리금에서 100억원 규모를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에 용자를 지원하며 수도권에 폐자원 비축기지(13천톤/년)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위생처리시설의 확충에 따른 납비현상의 해소대책으로는 주민,

전문연구기관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주민지원 및 지역 발전사업 추진을 병행하는등 주민 반대 해소를 위한 제도보완대책안을 '94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94년중에 광역위생매립지 13개소, 소각시설 16개소,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4개소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III. 대도시 대기개선

'93년도중에는 저황유리의 황합유 기준강화 및 LNG 사용시설의 확대 정책의 지속적 추진으로 서울시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92년도의 0.035ppm에서 '93년도의 0.023ppm으로 대폭 개선되었으며, 대기환경기준을 개정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질 관리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6대 도시와 경기도 67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공사장 등에 세류·세차시설등 먼지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도로상의 흙먼지 제거용 진공청소차량을 100대에서 138대로 확대·운영케 되었다. 자동차공해방지를 위하여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율을 93%까지 확대하고 휘발유를 완전무연화하였으며 경유차의 매연기준을 50%에서 40%로 강화 적용하고, 경

유의 황합유 기준을 0.4%에서 0.2%로 강화하는 등 다각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아직 동절기 화석연료의 다량사용으로 대기오염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높은 수준이며 자동차의 급증으로 서울의 대기오염물질중 61%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94년 주요 추진계획은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을 '92년의 90% 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하여 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연료 품질기준의 강화와 경유자동차의 엔진개선 및 매연여과장치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운행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부품의 봉인 및 정기검사제도를 도입·추진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도시 대기오염 개선대책으로는 서울시내 소형빌딩(0.5톤 미만)에 대하여도 청정연료 사용의무화의 확대추진과 지하철, 대형공사장의 먼지저감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체감 대기오염도 개선방안을 학계, 전문기관과의 공동조사 연구사업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기를 이용하여 황사의 이동실태를 조사하고, 충남 태안, 제주도에 장거리이동 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하는 등 동북아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이동실태의 입체적 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IV. 자연환경보전

'93년도의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의 확대와 야생 동·식물의 보호강화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3년까지의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평 명지산등 3개지역(36km²)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6개지역 91km²을 관리하게 되었다. '93년 6월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으로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한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게 되었다.

'94년 추진계획은 시·도별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국립생물자원보전관의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는 등 지역자연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금년부터는 토지이용규제 완화정책에 의하여 개발사업이 증가될 예정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의 건수도 '93년의 536건에서 '94년의 680여건으로 27%로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자연훼손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기 위하여 개발과 생태계보전이 조화되도록 사전환경성 검토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평가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정형화된 사업은 주요항목만 중점평가하여 협의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용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V. 환경사고 방지

'93년에는 유독물 취급업소의 사고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방환경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독물 취급업소에 방제장비·약품을 비치토록 하였으며 수입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를 전산화하고, 유해성이 큰 품목은 유독물로 지정·관

리하였다.

'94년도의 추진계획은 유독물의 돌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원 주변 및 다량 취급업소(173개)는 년 4회이상 점검하고, 하천의 유독물 유입방지를 위한 취약지점의 점검과 연휴기간중의 점검과 비상연락망 운영을 강화하는 등 2,921개소의 유독물취급업소의 점검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유처리제의 성능검사방법개선 및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141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하였다.

VI. 환경행정 규제 완화

환경행정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절차의 간소화 및 관리인 의무고용기준의 완화 등 48건은 '93년중 규제완화를 완료하였고,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기준의 완화 등 24건은 '94년 상반기중 조치예정으로 있다.

'94년 추진계획은 민원 유형별로 모범서류모델을 제시하고, 구비서류 단순화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공무원과 업체 종사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원창구 현장확인을 통하여 규제완화의 참뜻이 민원인에게 체감되도록 독려하는 한편, 급속, 화학공업 등 주요 업종을 선정, 실무공무원들이 일정기간동안 공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규제완화 과제를 토의 발굴토록 할 계획이다.

VII. 환경보전에의 국민참여 확대

'92-'93 동안 언론기관과 함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획기적 효과를 거양하였는데 '94년에도 지속적인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민간환경단체가 자율적으로 『맑은 물 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토록 지원하고, 민·관 합동의 수질감시체계 구축, T·V. 상업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실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등의 체계적인 환경교육기회의 확대로 환경논리의식을 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리고 유원지등 공공장소에서의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환경보전의식이 생활화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VIII. 환경과학기술 개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대기, 수질분야는 60%~80% 정도 근접해 있으나 폐기물 소각·환경청정기술은 20%~30%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선진기술개발계획(G7-프로젝트)의 환경과학기술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개선 및 수입대체 효과가 큰 21개 핵심기술을 선진공업국 수준으로 도달하기 위하여 2001년까지 2,315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우선 '93년도에는 저공해 소각기술개발 등 15개 과제에 87억원을 지원하여 연구를 착수하였다.

'94년 추진계획은 기술개발을 위해 필요한 296억원중 99억원은 재



추진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과의 환경기술협정을 구체화하여 전문인력의 교류와 공동연구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반면 중국, 태국등 아시아 개도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연수를 실시하여 환경산업 수출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IX. 그린라운드(GR) 대비

지구환경보호를 위하여 발효중인 150여개 국제환경협약중 야생동물·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73),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87)등 17개 협약에 이미 무역규제수단이 포함되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자국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수단으로 환경규제기준의 국가간 차이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제품의 생산, 소비 전과정이 환경에 적합한지를 인증해 주는 국제환경표준규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GATT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린라운드 준비에

정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환경오염방지금 및 민간부담을 확대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중, 한·일 환경연구원간의 공동연구사업의 착수, 향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엔 환경기구(UNEP)도 세계 각국 환경장관 회의를 소집('94.2)하는등 그린라운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책으로는 이미 발효된 바젤협약 및 생물다양성협약에 금년중 가입하고, 구체적인 이행의정서 제정협상에 적극 대응하는 등 주요 국제환경협약에 조기 가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수용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2월중 미국, OECD 등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해외환경주재관(4명)과 공관 등을 활용하여 선진국에서 실용화 단계에 있는 저공해 제품·공정기술의 개발현황을 조사하는 등 국제동향의 신속 입수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의 환경규제기준과 국제환경표준규격기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내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